

KNSI REPORT

컨퍼런스

4대 싱크탱크 공동포럼(제6회 코리아포럼) 녹취록 요약본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일시 : 2007년 03월 07일 (수) 14:00-18: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1부 : 대안적 발전모델과 한미FTA

- 사회: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발표: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정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토론: 백영서 (연세대 인문학부 교수),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2부 :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 사회: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발표: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토론: 송호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주최 :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코리아포럼은 연구자-정책결정자-관련 전문가들이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장입니다.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1부 : 대안적 발전모델과 한미FTA(14:00~15:30)

사회 : 최대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발표 :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정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 : 백영서(연세대 인문학부 교수),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최대욱

전문가 14명이 모여 한미FTA가 촉발한 문제와 그 대안 등을 고민하고 『한국형 개방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오늘 토론은, 책과 관련한 발표와 한미FTA 8차 협상을 앞두고 그간의 협상을 짚어보며 종합평가하는 모임을 함께 하는 것이다. 김종걸 교수님의 발제를 들겠다.

김종걸

첫째로,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에 미국은 어째서 FTA를 제안하게 되었고, 미국의 의도는 어떤 것이며,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동안 동아시아 통합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무엇을 했어야만 하는가를 상대방의 전략과 우리의 전략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의 향후 전략, 그리고 이에 비추보았을 때 미국과의 FTA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략에 논리 정합하는지, 배치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은 어떠한 입장일까. 첫째, 미국에게 유럽연합의 약 4배 이상, 나프타의 5배, 가장 성장력이 높으며 세계경제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동아시아경제권 형성에 있어 미국이 거기에서 일정부분 배제되었을 때, 그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위기의식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상황이 동아시아 화폐통합으로 가는 상황까지 되면 동아시아에 환류되고 있는 달러가 다시 미국의 국채로 환류되지 않는 한, 지금처럼 4천억 달러가량의 재정적자와 8천억 달러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매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존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형식이건 간에 동아시아 그 자체에서 자기완결적인 경제통합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에게는 이에 관해 APEC이라는 형태의, 많은 나라를 묶고 그들과 함께 약한 형태의 지역통합으로 가는 소위 ‘물타기’ 방식은 자기 완결적인 지역통합으로서 유리하지도 않고 어떠한 실익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국민소득 4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까지의 다양한 수준의 국가들이 모인 APEC이기 때문에 경제통합체의 기능은 작용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존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움직임에 미국이 한 발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때,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전략, 소위 FTA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2003년 싱가포르, 그 뒤에는 한국, 태국등과 함께 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체나 공동체에 있어 97년 경 미국 신자유주의 등에 대한 외압에 저항하는 논리가 탄력을 부여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재편논리에 대항하는 경제틀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체를 논의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일본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은 동북아와 한·중·일이 함께하는 형태의 기본이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아세안,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 또한 경우에 따라 미국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지역주의이다. 당연히 중국을 포위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여 아세안+2 한·중·일 형태를 추진하고자 한다. 한·중·일 FTA나 통합의 이야기가 나와도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거의 없다. 연구그룹과, 여러 협력안건이 이야기 되고, 장관이나 정상들의 만남이 있어도, 움직이는 것은 없었다.

만약 FTA로 인해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가 된다면,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그 결과 모든 나라가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과연 한미FTA로 인해 매력있는 국가가 될 것인가? 경제성장에 조정비용까지 생각해 보았을 때, 경제통합 과정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도에 융합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조정비용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상당한 사회적 고난의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것들이 그대로 비용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시장이 확대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이 확대된다면 미국시장을 목표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한국을 경유해서 수출하고 싶은 나라가 많아진 뒤 한국은 매력적 국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주요제품들을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관세를 높게 잡아 수입하고 있는 부분은 승용차, 신발, 섬유 등이다. 그런데 승용차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이른바 빅3에 이겨본 적이 없다. 또한 섬유나 신발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미국시장이 열려서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시장 확대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 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세울 것이다. 미국경제교류가 강화되면 물류자본이 오가며 미국자본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B.I.T(양자투자협정)를 맺은 나라가 60개국이다. 하지만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말씀 드린 대로 미국시장 수출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을 경유한 미국수출을 노리는 투자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한국에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하는 것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 투자에 있어 한국이 그 정도로 금방 매력적이 될 요인이 없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8%정도의 선에서 보호되어왔던 시장이, 그 비율에 있어 더 저하되고, 관세가 하락함에 따라 한국에서의 거래비용이 줄어들면 들수록, 미국에서의 자본금과 특히 생산자본들이 다시 철수 및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NAFTA이후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투자요인도 아닌 것이다. 한미 FTA가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동아시아경제통합에 있어,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매력도를 더 상승시키고 경제통합에 있어 상당정도의 지렛대효과를 낼 힘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 상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가장 큰 위험성은 한국의 매력도를 늘리지 못한다는 소극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소위 미국식 경제체제를 가져온다는 것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이다. FTA라는 것은, 미국식 제도가 이식되고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이 적용되어 경제시스템 전반이 급격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국식 경제모델과는 다른 정치 경제체도를 유지하고,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의 동아시아에서 있어서 우리가 추진해야할 경제모델과는 상당히 다른 모델로 한국경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흔히 경제학에서 '잡탕효과' 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많은 나라와 FTA를 맺게 되면, 원산지 개념의 복잡화 때문에 물류가 확대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거래비용이 더 늘어나서 실제적으로는 경제자유화가 더욱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제도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경제시스템, 동아시아가 추진하는 경제시스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을 때 한국에 가장 나쁜 영향은 무엇일까. 바로 양쪽의 칼날을 같이 잡고 있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스템과 동아시아의 시스템을 양 날로 잡고서는 국제협력이나 상호보완의 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한미 FTA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동아시아공동체의 특수성을 날려버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 FTA는 일방주의·양자주의 통상전략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를 포섭하려는 전략이며, 단결된 동아시아 지역통합체를 저해하려는 의도에서 실행된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강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류 미국식 모델을 운영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1997년의 외환위기라는 동아시아 공동의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단순한 '자유화' '원활화' 라는 신자유주의 모델이 아닌, 지역 공동의 협력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자율성 확보였던 것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려는 자유주의적 개혁과 함께, 시장의 ‘실체’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지역공동체의 ‘공공성’ 확보도 중요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불가능하다.

한미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동시진행이 가져올 최악의 경우는 양손에 칼날을 잡고 있는 경우다. 미국과의 FTA에서는 우리의 산업정책적 여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은 배려해야 하는 상황 말이다. 미국과의 FTA에 의해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한 후, 강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쟁과 배려’의 협력을 추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종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자살률, 이혼율, 노동산재율,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이력은 그 정도의 여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양손에 칼날을 쥔 ‘잡탕국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애초부터 이념과 지향점이 상당히 다른 한미FTA와 동아시아경제통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는 형태,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앞으로의 우려이자 예상되는 모습이라 하겠다.

신정완

한미FTA의 필요성과 타결을 옹호논리의 요점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국의 제도와 관행을 한국 경제에 이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제도들을 선진화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우리가 모방해야 할 최선의 대안인가, 둘째로는 미국의 경제시스템에 장점이 많다 하더라도 이를 한국에 이식하면 미국에서와 같은 성과가 나올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빅뱅형 개혁이어야 하는가이다.

그렇다면 대안적 한국경제 발전모델은 없을까? 한미FTA 추진세력이 한국경제의 대표적 문제점인 양극화 심화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고리 단절, 잠재성장률 저하를 한미FTA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체로 부적절한 처방으로 느껴진다. 양극화는 성장을 자체가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성장의 성과가 일정부분에만 고여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한미FTA 추진세력이 비교적 가볍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는 국민경제의 안정성 문제다.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현재의 세계경제 흐름은 국민경제의 유연성 제고와 안정성 확보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적정결합을 의미하는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진자본주의국의 주요경제모델의 특징과 성과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미모델과 일본모델, 독일·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유럽모델 등이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어떤 모델도 완벽하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북유럽 모델이 가장 우수하며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등이 조화롭게 발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경제발전모델은 북유럽모델을 중심에 두되 미국식 모델의 일부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측면에서는 북유럽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보육, 양로,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부문이 규모도 크고 정교하게 발전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시급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는 평생교육제도 등을 통해 실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복지학과와 노동경제학과에서는 ‘학습’과 ‘복지’를 합성해 만든 용어인 ‘학습복지’라는 말이 유행한다. 학습복지 영역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들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학습복지의 강화, 즉 복지·교육·고용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정망’의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사회학습망’이자 사회구성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고용안정망’으로도 기능해야 하고 한국의 미래 복지국가 모델은 사회구성원을 각종 개인적·사회적 위협으로 보호해줄 뿐 아니라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학습능력, 취업능력, 혁신능력을 증진시켜주는 empowering welfare state, 능력증진형 복지국가, 성장친화적 복지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질서는 여성 친화적이고 중고령자 친화적으로 짜여서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고령자의 생애취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수준의 고용안정보다는 사회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유연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만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성 일변도로 치닫고 있으므로 중·단기적으로는 기업

수준에서도 고용안정에 더 무게를 둬으로써 노동자들이 기업에 귀속감을 갖고 일하며 자기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적정 수준의 '유연안정성'에 도달하기 위한 합당한 경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수준은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정책의 경우엔 세계화로 인해 정책수단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FTA추진론자들은 FTA타결 자체를 산업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경제의 강도를 높여 산업구조조정을 이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의 학습능력과 혁신능력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또 현실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에서는, FTA추진세력들이 기존의 잡다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성과가 매우 낮기 때문에, FTA체결을 통해 중소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장개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원하청구조를 개선하고, 일본의 도요타자동차회사의 경우에서처럼 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이 있으며, 지역에 뿌리내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수준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 등이 있다.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산업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교사 간, 학교 간 경쟁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간 수준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주요 약점들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재벌중심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와 순수한 주주자본주의 모델 사이의 양자택일적 구도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신통한 묘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고려해볼 만한 대안으로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소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발언권 행사, 현행 사외이사제의 내실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 발전모델의 성격과 관련해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발전국가적 성격이 오래 유지되다가 문민정부 이후의 과도기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에는 구미와 마찬가지로 슈퍼대국, 혁신국가를 뚜렷이 지향하고 있다. 한미FTA 추진은 이러한 지향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미 나라들이 대략 한 세대에 걸쳐 발전시켰던 케인즈적 복지국가발전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사회들의 경우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성격이 아주 소멸했거나 결정적으로 약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슈퍼대국과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요소들을 적절히 취사선택하고 잘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교육 정책은 여성과 중고령자의 취업률과 생애고용기간을 연장하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산업정책과 거시정책은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경제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짜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능력증진형 복지국가' 이자 '복지확산형 혁신국가' 로 진화해 가야 한다. 그렇지만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향후 한국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성격을 일정한 반향으로 강하게 한정하는 효과를 갖기 쉽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동반성장' 을 강조해왔는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고리의 강화,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완화, 잠재성장률의 제고 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경제의 대외지향성 강화와 시장원리 편향성 강화를 야기할 한미FTA는 동반성장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진정 국민의 역량을 신뢰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길을 국민이 잘 따라와 좋은 성과를 낼 것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시스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내는 역량까지도 믿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정도일 것이다.

백영서

한국에서의 동아시아 담론은 97년 이후 등장한 것이 아니고, 90년대 초부터 생겨났다는 점이다. 7,80년대 민중운동의 변화를 겪고 탈냉전 이후의 정체성으로부터 새롭게 지역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탈냉전 이후 새로운 공간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남쪽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바라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봄으로써 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던 담론인 것이다.

민족주의까지도 넘어선, 다양한 대안적 발전모형을 찾는 것이 그 주제였다. 주로 인문학도들이 그 논의를 시작했고, IMF경제위기 이후 ASEN+3이 가시화 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협력체 등의 용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참여범위가 사회과학도들로도 확대되었다.

또한 경제통합이라던가 동아시아공동체라던가 하는 개념, 이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인가?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제협력체라고도 하고, ASEN+3이라고도 하고, 동아시아공동체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며, 지역주의와 지역공동체라고 하면 다 좋은 것이냐,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냐 하는 것들이다. 어떤 지역주의이며 누구를 위한 지역주의인지. FTA는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협력체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인가. 그런 식의 개방이 좋은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서의 한국형FTA등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든, 좁은 의미의 ASEN+3 경제협력체 논의든 간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하는가’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인문학도들이 90년대 초 동아시아담론을 형성하고 일·중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게 된 것도, 과연 얼마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자율적일 수 있는가라는 이유가 분명 작용했다. 반미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으나 구조적인 제약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했다. 이것을 빼고 동아시아 담론이든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다.

증상기적 질문을 던지겠다.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한다 했을 때, 미국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경쟁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며, 순서를 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안적 개방전략모형을 찾는 것과도 관계가 되겠지만 그것이 국내 발전전략과도 직결된다고 본다. 또한, 만일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동아시아경제통합과 대안적 개방모형이라고 하는 논의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무리 발언으로, 중국학자의 한 마디를 소개하겠는데,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에 효율적 모호함을 남겨두자’ 는 것이 그것이다. 동아시아라는 것을 지나치게 딱 짜인 틀로 생각하지 말고, 모호함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끌어들이자는 이야기였다. 물론, 중국 나름의 전략이고, 미국에 대한 견제의도가 깔려있는 발언이기는 했지만, 이런 것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이병천

동아시아경제모델들 중에서도 한국은 재벌형태의 발전과정으로 움직였다.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밀어내면서 민간주도 형태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벌의 요구와 힘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결국 시장을 끌고 가게 되면서, 마침내는 개방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방향은, 역설적으로 박정희 모델에 대한 친화성을 띄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87년 이후, 민주정부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을 터인데,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 특히 급진적 자유화와 개방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한 묶음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함께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 민주정부의 특수한 성격, 교조적 시장주의니 하는 식의 여러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부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기회가 97년 외환위기 등을 기점으로 어렵게 되었고, 관료들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초기에도 이를 비틀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그 시도가 짧기도 했고,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FTA로 오는 데 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내용적으로 미국화 프로젝트이면서도, 싱가포르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노대통령을 보면서, 한국의 선진통상국가화나 선진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의 바탕을 한국의 싱가포르화를 통해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선 한국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상당히 다르다. 또한, 싱가포르는 일종의 개발주의적 복지국가로서, 복지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며, 개방을 하더라도 그 틀이 존재한다. 그리고 복지 뿐 아니라 산업부분도 국가적인 면에서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비즈니스허브화 전략을 지나치게 비약시켜 띄웠다. 서비스 부문을 자체성장동력화 한다는 사고는, 한국의 발전단계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 비약이 너무 심하고 적절하지 못하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서비스나 제조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여러 가지 내부의 불균형과 함께하고 있는 이중구조 보완에 활용하는 것이 기초 경제 여건상으로는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 후 서비스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동반 성장의 길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한미FTA가 동반성장에는 극도로 모순되는 점이 크다. 일단, 국가주권을 양보하는 것과 같고,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자본의 사회적 책임부분이 날아가 버린다. 결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과 한미FTA는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한국은, IMF체제를 극복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화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은 IMF체제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두 개의 대한민국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FTA라는 것은, 97년 이후 확대·재생산·심화되고 있는 IMF체제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이며 더욱 거대한 시장과, 더 확대된 개방, 더 심화되는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과 안정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성장동력의 재구축이라고 하는 과제를 과연 실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면은 우리가 예측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산업·경제적으로 성장 동력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이냐,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아르헨티나 같은 사례의 리버스(reverse)를 기록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혹시 한국이 업그레이드가 아닌 역전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야겠다.

대안의 부분에서 몇 마디 한다면, 우선 한·미간의 정치 군사적 동맹과 개방의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전에, 외교 통상부에서는 중국이 과격적인 조건으로 FTA를 먼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우선하게 된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잘 구분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도 구분하지 못하고, 국정운영이나 사고의 움직임과 그 프레임 등이 아주 얇게 형성되어 있고, 흔들리는 면이 있다. 너무 쉽게 흔들리는 감이 있고, 대통령과 관료 모두 극복하려고 했겠지만 FTA의 경우 대통령이 위쪽에서 눌러 앉아버린 느낌에다가, 개방과 쇄국의 문법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1과 2사이에 분명 1.5도 있고 대단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유연한 진보, 유연한 사고가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과 쇄국의 이분법을 넘는, 관리된 개방, 한편으로는 개방의 이득을 얻되, 어떻게 하면 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어떤 식의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나라 자체 경제 산업정책의 한계성을 자율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내부 발언권이나,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내부를 통합하는 길을 갈 수 있는지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김종걸

한미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같이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추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FTA가 한국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와서, 그로 인해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가 되고, 누구나 손잡고 싶어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상 실증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가 되기 쉽다. 사실, 한·미FTA와 동아시아경제협력의 지향점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동아시아경제협력체나 공동체의 이야기는 진행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 각 자본의 국적과 국가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이며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려도 분명 함께하여야 한다. 개방모델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식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미FTA 등을 어떻게 동아시아경제협력의 틀에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고민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동아시아경제협력의 모습을 구체화시켜줄 것이다. **KNSI**

2부 :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15:30~18:00)

사회 : 이병천(강원대 교수)

발표 : 이해영(한신대 교수)

토론 : 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조명래(단국대 교수),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병천**

제 2부는 한미 FTA협상 종합 평가와 검토를 하고 가능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다. 이해영 교수님 발제 들겠다.

이해영

이 발제는, 수치적 근거까지 갖춘 손익계산을 통해 한미FTA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것이 포괄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개되고 있는 협상의 구체적 정황에 대한 정보들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흘러나온 정보를 모자이크 하고, 예상 가능한 범위까지 추정치를 제시하기위한 시도를 했다. 이 보고서는 일종의 대략적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아직 최종적인 보고서가 될 수는 없다. 내일 8차 협상을 앞두고, 7차까지 관찰되고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지금까지 협상의 주요한 틀을 놓고 볼 때 가장 먼저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빅딜(big deal)이고, 빅딜의 대상으로 흔히 언급되는 것이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무역구제 관련해서 20개 가까운 조건을 제안했다가 줄이고 줄여 막판 비합산조치까지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WTO상의 세이프가드와, 다자세이프가드 나머지가 남아있다. 물론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합산을 포기했다고는 말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자동차 의약품 같은 경우 특히 자동차 경우, 상황에 따라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미국측의 상황을 봤을 때, 특히 미국 세입세출위 산하 무역통상소위 위원장, 미국측 한미FTA 일반에 관한 발언권이 강한 인사인 샌더 레빈이 세입세출위원장과 함께 부시에게 보낸 편지가 보도된 것을 확인하시면-작년 8월 자동차 공정무역 법안이라는 것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한국 내에서 수입차 판매비중이 20%에 달할 때까지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율을 동결해야 한다.’ 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자동차노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 내의 중진급 이상 위원들의 기본적 흐름에서 본다면 자동차 압박은 매우 강한 수준이라 생각된다. 현재 2006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2%다. 4.2%인 수입차 점유율이 20%가 될 때까지 관세율을 동결하자는,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다. 20%의 실제 대수로는 대략 15만에서 16만대정도로, 현재 국내 3만 3천대 정도에서 수입차가 늘어나는 것은 세제개편, 결국은 ‘세제 철폐’, ‘제거’ 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도 잘 알려져 있고, 자료독점권을 보장할 것 등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 피해액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미국에 무역구제와 관련해 처음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두 100% 관철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경제효과는 대략 1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역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약 370억 달러의 수출손실이 무역구제관련법, 즉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이것이 전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역구제의 여러 가지의 조항 중에서 각 조항이 가지는 비중은 천차만별이다. 그 중,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로잉 조항이다. 연구자들이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조항 한 가지가 없어지면 덤핑마진이 86%가 감소하고, 금액으로 보면 13억 달러가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대효과의 최대치를 잡는다고 해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는 없다. 반면에 미국 요구 사항인 자동차 관련 세제의 완전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측 자료를 따랐을 때 약 40억 달러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곧바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이 부분을 금액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의약품 특허의 연장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피해추정치에 큰 차이가 있다. 약값이라든지, 각종 추가적 인상 등을 통한 부담이, 보건의료연합에 따르면 10억에서 14억 달러 수준이고, 보건복지부는 1억 2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불 수준이다. 만에 하나 빅딜이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이 대차대조는 멸절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근의 설 중 하나는, 자동차·의약품과 무역구제간의 딜이 아니라 자동차건을 분리해서 미국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쪽의 세제개편건과 연결해 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앞서 예측한대로 딜이 성사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 미국측에 내줘야 할 이익은 막대하다. 이는 엄청난 비대칭 상황이다.

두 번째 빅딜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농산품과 섬유분야다.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추정치 제시에 있어 용이하다. 일단 무역수지로 봤을 때 섬유의류가 20억 달러 흑자, 농업이 20억 달러 적자가 나는 수준이다. 작년 이후로부터 농산품에 관련한 피해액 관련된 추정치는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일단 쌀 등 민감품목을 제외한 경우,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분석 결과는 18.5억 달러의 피해가 있다, 반면, 섬유협회의 추정치로서, 관세 철폐나 원산지표시 원칙완화를 요구하는 우리 원칙이 100% 관철되었을 때 기대 실익이 2~4억불이다. 설사 취약하다 할 수 있는 농업과 강하다 할 수 있는 섬유에서 빅딜이 이루어졌을 때도 경제적 대차대조는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 불리하다. 빅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쇠고기의 경우, 2003년에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소고기 물량은 20만톤 가량이었고,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 달러에 가깝다. 광우병 이후 미국은 이 시장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산 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결국 호주산을 수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산 금지 이후 늘어난 소고기량은 단지 2만톤 가량 뿐, 광우병 파동으로 소비량의 전체가 급감한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던 부분이 호주 쪽으로 무역전환 되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은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40%의 관세철폐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치명적인 국내축산업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은 추론이다.

투자자 정부 소송제(ISD)에 관해서는, 여태까지 알려진 것처럼 부동산 가격안정과 일반과세 부분을 빼고는 이미 미국안대로 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아마 투자분과의 합의는 BIT2004(미국 투자협정표준안)대로. 즉 미국의 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간접수용 부속서의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안정과, 일반과세 문제는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측이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요구를 분명 들어줄 방법은 있다. 예를 들어 이면합의라던가 확인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 등이 있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사실 ISD문제는 본래 분과장급에서 처리하려다가, 부동산 사안과 연관되는 등의 논의 확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화되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협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기에도 가장, 협상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아마 협상 막바지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협상 건으로 남아있는 다른 사항들은 사실 조약에 넣느냐 마느냐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넣어서 체결한다 해도 실효가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최근 한·미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한 투자는 압도적으로 주식에 몰려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장기채권에 몰려있다. 미국의 대한투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임을 알 수 있다. 만일 투자분과의 안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관철된다면, 향후 미국의 한국투자 시장에 관한 예측을 해 봤을 때, 협정 체결 후 일시적으로 미국의 투기성 자금이 한국시장에 좀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 기다리는 외국인 직접투자, 건전성투자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 무역수지의 경우,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점점 규모가 커져서 -40달러 수준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외통상구조는 크게 제조업에서 이득을 내서 서비스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다. 특히 서비스에서 적자를 보는 곳이 대부분 미국(40억 달러)과 EU(39억달러)다. 이 적자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다, 즉 지적재산권 분야다. 현재로서 우리나라 통계의 수준으로 보아 지재권 분야의 정확한 피해액 내지 적자규모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 급격하게 늘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에 이어 꾸준히 늘어 두 번째로 그 규모가 큰 -20억 달러다. 협상을 통해 대폭 양보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여러 분야 협상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수준의 협상이 지재권 관련 결과인 것 같다. 거의 다 내어준 상황이다.

법률회계 등 서비스수지수치에서 빠진 항목 몇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업서비스 수지 즉, 비즈니스서비스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분야의 적자 역시 -9억 달러 선을 유지하는데,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조가 다를 수는 있으나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일부 논자들이 서비스 쪽의 개방을 유보했던 것들, 대부분 사업서비스 수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두고 한미FTA가 낮은 수준, 중간 수준의 FTA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유보 부분의 액수를 서비스적자의 가장 큰 부분인 여행수지와, 지재권 쪽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실로 현저하게 적은 액수일 뿐이다. 개방의 분야를 몇 가지 제외한다고 해서 개방 수준이 낮다, 또는 중간수준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외에, 전자상거래 분야도 4조에서 5조, 즉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의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다. 피해규모가 실로 크다.

정부조달에 관한 면은,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 최근 63.3%에 달하는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포기하고,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조달시장도 유보하겠다고 하지만 내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공기업이 빠진 것 같지 않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겠다.

우리가 주정부 비합치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은 처음부터 이 분야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마치 이것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며 7차까지 왔다. 하지만 본인이 확신컨대 가능하지 않다. ‘안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미국은 한 개의 연방국과 50개의 주법이 있는 나라로 보면 된다. 그런데 50개의 주법에 대해서 한미FTA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미FTA가 타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각 주지사에게 가입 여부를 묻게 된다. 미-페루FTA같은 경우 단 아홉 개의 주만이 가입의사를 밝혔는데, 한국은 매우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아홉 개 주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가입의사를 밝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포기할까.

노동환경조항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서 처음부터 어정쩡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공적 대화(public communication)같은, 어찌 보면,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면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 때문이다. 미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 결과로 ‘노동환경조항’이 FTA표준항에 들어가 있는데, 만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측에서 당장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맺은 페루와 콜롬비아에서도 노동조항 때문에 재협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연 향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해야 할까. FTA가 발표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솔직히 과거, 당시 추정했을 때 FTA가 양국 의회를 통과해 발효될 확률은 12.5%였다. 고작 그 정도였던 가능성을 잃고 지금 FTA가 타결되려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묘한 심정이다. 향후 미 국내법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TAP(무역촉진법)를 중심으로 협상은 전개될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3월 말까지 FTA를 체결하게 될 확률이 높다. 3월 말까지 협상을 모두 마치고 6월 말 경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구실로,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양국 정상이 함께 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아마 이 일정에 따르면 부시가 이달 말쯤 의회에 의향서를 보낼 것이고, 그 때 한미FTA초안이 넘어가서 90일간의 협의를 거친 뒤 공식체결을 위한 서명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미대통령은 상하양원에 법률수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그 뒤 법률에 기술된 이행법안의 초안이 나오게 되는데, 그 후 행정부가 이 초안과, 최종협정문을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정 없는 가부를 정하게 된다. 앞으로 가장 빠른 시나리오를 예상한다면, 6월 말 서명을 하고 7월 초 최종협정문과 이행법안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초까지 가부가 결정 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현실성이 부족한 이야기고, 미 의회의 가부능력을 통한 처리는 9월을 넘어가고 그 후에 작동되지 않을까 한다.

TPA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백지수표를 끊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상관련 법체계 자체가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백지수표를 끊어준 상태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통상절차법을 만들자고 제의했더니, 갖은 핑계를 다 들어가며 거부하고, 현재 국회에 나와 있는 통상절차관련법안도 심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저 물타기용으로 만들어 놓은 안일

뿐만, 처음에는 민주노동당에서 대표발의 했다는 것이 문제점인가 싶었는데, 후일 열린우리당에서 두 개나 더 내놓아도 역시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 물타기용일 뿐인 것이다. 유감스러운 관행이 정상인 것처럼 횡행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다. 6월 말, 양국 정상이 조약에 서명해 버리면, 국회에는 비준동의안이 넘어오게 된다. 그 비준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 또한, 올 하반기 이후로는 대선국면인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 문제다.

한마디로 한미FTA협상에서 지금까지의 진도는 ‘God Bless America!’ 라고 해야겠다. NAFTA이후의 매우 성공적인 FTA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사례가 될 것이다.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따뜻한 시선(?)으로 맞이해야만 하지 않을까- 물론 그에 반해 한국 협상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다. 현 정권은 ‘비주류의 비주류’ 를 자처하면서 집권, 한미FTA의 타결을 주도하였다. 향후 여기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시민사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계의 재정립 또는 결별이 필요하다.

이병천

한미FTA가 ‘God Bless America’ 가 될지 Korea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America쪽이 아닐까 싶다. 자료집 뒤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려 있다. FTA협상 사안마다 경과와 개요를 잘 설명해 놓은 설문이므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의견 서술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송호창

다른 분야가 어떤 협상, 계약체결의 각론 조항이라면,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은 이 각론을 한꺼번에 뒤집어엎을 수 있는 총론적, 핵심적 조항이다. 일반적인 계약서에서 보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협상과 양보 등을 통해 조항을 주고받고 적어 내려갔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는 내용이 붙게 마련이다. 마지막 조항, 이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줄다리기를 했던 많은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FTA에서는 이것이 바로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한 협상경과를 살펴보면, 2006년 6월, 한국정부가 NAFTA의 협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고 아무런 문제의 식이나 의견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미 그 당시 모든 것을 다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겠다. 투자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제소당할 수 있는 사항을 게다가 한국 법원도 아닌 미국의 법률전문가가 대부분인 국제중재위원회에 의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들고 있던 카드를 모두 던져 준 것과 같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민사회진영과 전문가진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다 내어주고 난 다음에야, 태스크포스팀(task force)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야 투자자-정부제소 조항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전부 다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국내의 집값과, 도시개발 관련 사안이 한국에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이고, 국민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미 다 내어준 뒤 9월에 가서야 법무부에서 수용부분에 대해서는 분쟁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2006년 4.5차 협상단계에서 간접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며, 조세정책, 반독점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서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을 빼자는 제안을 한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다 받아 챙긴 상태에서 우리 법제상에는 있지도 않은 간접수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고, 올해 1월에 와서 미국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히니, ‘단 몇 가지라도...’ 라는 애원조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른 조항도 대동소이하긴 하겠지만, 특히 결정적이고 총론적이며 중요한 이 조항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협상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 직접적 수용과 관련하면 이 제도로 인해 부동산 관련 법제가 바뀌어야 하는 것만 하더라도 21개가 넘고, 간접수용 측면까지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법제 모두 해당된다. 이 법이 전부다 위헌이 된다고 생각해 보라. 이것은 국가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가 된다.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 드려보겠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국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미국 투자자의 경우 국내 법원에 보호를 해 달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당연히 국제 중재를 신청하게 된다. 국제 중재신청을 하게 되면, 국내 사법권은 전면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일단, 우리의 사법제도는 3심 제도로, 1심에서 패소해도 다시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세 차례의 절차가 있는데, 중재제도의 특성상 단심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 한 번 중재판정이 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게다가 중재의 구성자체를 살펴보게 될 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절반을 투자자가 선택해 구성하게 되어있다. 당연히, 국제중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사전문가가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추천하든, 한국정부가 추천하든, 대부분 미국 변호사가 배석한다. 단심에, 비공개 진행이라는 점 때문에 그 안의 어떤 로비나 배후의 영향력이 작용하더라도 알 수가 없을뿐더러, 문제가 되지 않으며, 로비 역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모든 국제 중재는 영어로 하게 되어있는데, 재판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진술을 영어로 하고 증거자료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장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까지 모두 영어로 하게 된다. 한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 변호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미국 변호사만큼 논리적인 영어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과정의 비용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며, 중재 구성·절차·결과 자체가 우리의 사법적 판단을 전혀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중재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과 FTA협상 규약이다. 이 두 가지는 현재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한국의 법률과 헌법에 엄청난 상충요소를 가지고 있다. FTA를 통해 어떤 판정이 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도, 결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게다가 우리 법원과 달리, 국제중재위에서 배상판결을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금액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겠다. 결국 이 조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내 행정·입법·사법권이 다 해당되지만 특히 사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헌법과, 법원 재판소의 재판결과조차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투자자와 국내 정부 기업이나 국민과의 분쟁이 생겨, 국내법원에서의 재판으로 갔을 때, 한국 정부나 한국국민에 대한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판결이 국제법에 맞지 않을 때에는 이 ‘재판 결과’ 조항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결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조항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거의 협상 막바지에 온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막바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늦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마지막까지 이 제안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현재까지의 FTA중 유일하게 호주·미국 FTA에서 이 조항을 제외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법무부나 건설교통부 등에서는 여러 위험성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외교부만이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내 의견 조율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회에서 체결비준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재고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우석균

현재 약제비가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7조 정도인데, 1년에 2조씩 오른다고 하면, 이 수준은 심각하다는 정도를 아예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통해 5조7천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어떤 사항이 합의되었느냐 하는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약값이 정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협상을 하게 된다.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끝이 나아하는데, FTA가 체결되면 3단계 협상을 하게 된다. 가격협상의 마지막에 제약회사의 이의제기 기구를 뒀다는 것이다. 협상을 끝냈는데, 제약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호주FTA에서의 사례를 들어, 이의제기 기구를 뒀지만 막상 사례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호주는 긍정적 예인 것이고, 약값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여 오래전에 정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중요한 약품 몇 가지만이라도 다국적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애초부터 약값적정화 방안은 실행되지도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를 아예 상설화하여 한·미가 한국의 의약품제도에 대해서 상설기구를

두고 협의를 계속하자는 것인데, 미국의 다국적 의약회사나, 의료기회사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의 의료체제를 반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쇠고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른바 뼈조각 문제가 핵심이다. 뼈를 조각내면 뼈가 아니라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게다가 뼈 문제의 심각성은 절대 간단치 않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실험결과가 있는데, 광우병 걸린 소의 갈비뼈에서 채취한 골수를 다른 소에게 주입했더니, 광우병이 걸렸다는 사례가 있다. 소량의 골수 주입을 해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소가 38개월 된 소였고, 30개월 미만의 소는 괜찮다는 이야기다. 38개월 소에서 이미 광우병 인자가 발견되었고, 그 미만의 소라고 해서 안전하겠는가? 뼈를 조각내든 어떻게 하든 간에 골수는 붙어있을 수밖에 없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이다. 차츰 밝혀져 가는 광우병에 대한 경과를 보더라도, 뼈조각의 문제뿐 아니라 사실상,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수입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다. 미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캐나다? 유럽? 모두 수입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위생검역부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쇠고기 협상 등이 FTA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뻔히 알고 있듯이 FTA의 가장 큰 딜브레이커다. 관료들이 분명 FTA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지금 와서 이 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조작식품문제다. 유럽의 경우 레스토랑에서, 유전자 조작식품에서 나온 어떤 성분이나 그 식품 자체가 나온다면 메뉴판에 ‘유전자 조작식품 섞여 있음’ 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그만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현재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유기 농산물 표시제, 농약 잔류량 표시 등, 많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이것은 앞으로 강화시킬 수가 없게 된다. 매우 미약한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 강화할 수 없는데다가, 유전자 조작식품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나 심지어 일정량 농약 잔류량이 남아있어도 유기농 농산물로 표시를 하는 미국의 기준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세 가지 문제를 다시 보자. ‘의약품 문제’ 바로 한국의 핵심적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문제다. ‘쇠고기’, 한국의 핵심적 위생검역제도의 사안이다. ‘GMO(유전자 조작식품)’는 밥상에서 우리가 겪는 핵심적인 건강의 주제다. 한국사회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 내어주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조명래

미국의 경우 국회가 협상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정부에 위임한 꼴이라고 하겠다. 저는 그러한 구조가 대내·외적 협상에 있어 우리가 결여한 대내적 협상을 강하게 작동시켜 미국 내의 어떠한 기제를 형성한 뒤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 내의 각 분야에서 반응은 다양할 수 있지만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 FTA에 관련한 이해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연결고리가 분명했던 것이다. 노조, 자동차협회 등과의 관계에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 네트워크의 결절 역할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역대표부의 협상내용에 반영이 이루어지며, 그 와중에 협상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이 부분에 한국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국은 대통령과 관료가 주로 협상을 하는데, 협상단에서의 핵심은 관료들 중에서도 외교관료들이 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TA에 관련한 사전·사후·중간, 모든 단계에서 의회에 충분한 설계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그러한 과정이 우선 대내적인 협상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생길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협상의 초반부터 이해관계자들이 달라붙어서 요구를 해대고, 모니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다시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책임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실제적 측면의 지적에 있어서는 이해영 교수의 평가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협상의 기본입장, 이익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빅딜에서 이익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될 것인가-일 것이다. 그런데 이해영 교수의 대차대조표만 보아도, 우리쪽의 손실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 등에서 발생하는 것과 농업·섬유 부

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합쳐보니, 최소 59억달러에서 149억달러까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외 지재권 등 모든 분야를 다 생각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손실이 누적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이 얼마고, 빅딜을 통해서 최종적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한 평가를 하되, 협상 이전에 정부가 각종 보고서를 통해 밝혔던 것들과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겠다.

아울러 주목할 것이,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영향 뿐 아니라, 협정문에 관한 이야기다. 협정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올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빅딜 등에 관해 수치적 계산을 하고 있지만, 그 협정문 자체가 어떠한 불평등 내지, 해석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태인

조명래 선생님이 말씀하신 'GOOD FTA' 등의 개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상초기 한미FTA가 중간수준의 FTA라는 말들이 나왔었는데 좋은 의미에서 중간수준의 FTA라는 이야기가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한미FTA가 중간수준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협상에서 특히 공공서비스부분을 많이 유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보 측에서 요구했던 FTA라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중간수준의 FTA나, 또는 강한, 높은 수준의 FTA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해야 한다. 미국형 FTA의 특징으로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 그 밖의 강력한 조항이 더 들어간 FTA는 절대로 중간수준의 FTA가 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FTA를 논의해 왔는데, 가장 저급한 이해는 FTA를 단지 '수출입의 문제나 무역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로 또 다른 이해가 있다면, '산업구조조정'으로서 FTA를 이해하는 것이다. 국내의 산업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국민이 합의하거나, 전문가들이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FTA를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그러한 과정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EU, 중국과도 추진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은 것은, '외교안보적 의미'의 FTA다. FTA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지면서 두 나라의 주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국의 경쟁적 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다. 다자주의에서, 경쟁적 자유주의로 노선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주변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위력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는 동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인 FTA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은, 남미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것이 되지 않으니, 각가격과의 전술을 취하게 된 것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략을 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은 물론이지만,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조차도 미국과 FTA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조차 FTA를 맺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덩석 미국의 의도를 실현시키게 된 것이다. 양국간 FTA를 통해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을 한국이 덩석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것들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외교안보적 면에 대한 이해'다.

한미FTA에 들어있습디만, MFN(최혜국 대우)조항이라고 하는 것 등으로 인해, 한국이 FTA체결을 했으니 또 다른 국가간 FTA가 촉진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FTA에 의해 그 지역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산되게 되어 있다. 두 개의 이상의 FTA를 다 연결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제체제와 제도가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면,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공공재를 개발하고-이러한 개발이라면 미국이 참여해도 좋다. 그것을 제도화해서, 부분마다 제도를 만들어 가고, 각 나라에 대해 이해를 하고, 같이 뭉치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아시아공동체를 생각했다면, 각 나라의 문제점과 그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해 합의가 났을 때 그것을 반영하는 아시아형FTA를 만들어 실행을 해야 한다.

일정상, 3월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한미FTA가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야겠다. 협상이 다 된 다음에 6월말까지는, 굉장히 심화된 내용, 즉 실제의 협상의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경제적, 법·제도적

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외교안보적으로까지 어떤 결과를 내게 되느냐 등을 모두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한다. 특히 대선국면과 얽혀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쉽사리 이야기 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것을, 대선주자들이 ‘이것만은 막을 것’ 이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이끌어 가면 미국에서도 합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6개월여의 기회가 주어져 있고, 이 시간을 느슨하게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총력을 기울여 분석하고, 홍보하고, 다시 분석하고 싸워서 막아야 한다.

만일 9월이 되기 전, 7월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소위 날치기 통과시킬 경우 비준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나오는 ‘한미FTA 협상 중단’ 이라는 입장의 정치권 구호 중 하나는 ‘한미FTA 협상 폐기’ 가 될 것이다. 폐기는 어쩌면 의외로 간단하다. NAFTA와 동일하게 폐기조항을 집어넣었다면 6개월 전에 통보만 하고, 6개월 후 자동으로 폐기된다. 폐기 한데, 만일 이 조약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난 뒤 폐기 된다면, 국민은 굉장히 겁을 먹게 될 수도 있다. 비준을 한다고 해도 그 뒤 곧바로 폐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플로어의 질문에 답하겠다. 지난 2006년 2월 23일 한번 노무현대통령을 만났다. 사실 10월경 한미FTA 추진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후 면담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되지 않았고, FTA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20일이 지나서야 만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을 만난 뒤 한 시간이상 FTA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렇지만 답은 ‘그래도 한다.’ 였다.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로 들고 있었던 것은, ‘중국이 곧 쫓아온다.’ 였다. 당시 대통령이 던진 첫 질문이 ‘중국이 한국을 쫓아오는 데 얼마 걸리느냐’ 였는데 산업경제 전공인 내가 ‘10년’ 이라고 말하자 ‘아니다. 훨씬 빠르다.’ 라고 확신하며 답변했다. 후일 전해들은 말로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3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그것은 IMF를 한꺼번에 맞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는 의견을 냈더니 역시나 ‘그래도’ 한다는 말씀이었다. 국민이 똑똑하고(?) 그런 국민을 믿기 때문에-라는 이유였다. 그리고 당시 함께 계시던 분들 중에 질문이 한 가지 더 들어갔는데, ‘대통령은 차기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 지금 이 사안(FTA)을 추진하면 다음 정권을 잃게 된다.’ 라는 말씀이었다. 그러자 ‘그래도 한다, 차기 정권에 대한 생각은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한다.’ 는 대단히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화도 되지 않는다. 양극화도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얼마 전 기자회견등에서 내뱉는 것을 보고, 이미 논리적 사고는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대로라면 사안은 6월경 끝나는 것이 확실할 것 같다.

송호창

비준 후의 파기 방법은 이것 역시 ‘조약’ 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하면, 안지키면 된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양국당사자중 일방이 이 체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파기하겠다고 하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후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별개의 문제다. ‘협상 체결단계에 대해 사후 법적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겠는가.’ 와 관련해서는 국내 사법절차로 따지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런 행위를 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석균

한국 정부가 뺏조각이 들어있는 상자만 반송한다고 해도, 결코 광우병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최소 잠복기간, 발병까지의 기간이 9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책임에서 도망치기 정말 쉬운 구조다. 한미FTA반대운동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FTA가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것도 놀랍지만 반대운동이 이만큼 빨리 성장한 것도 놀랍다. 한국 민중운동 전체 시민사회 진영이 단일 사안으로 한꺼번에 집결을 했다는 점, 반대론이 매우 꾸준하게 찬성여론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 심지어 반대운동이 FTA결렬까지 상황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그 수준을 제한시킨 정도까지 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중간수준의 FTA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중간수준이니까 해도 된다.’ 는 식의 추진논리도 있었는데, 추진 쪽에서도 하고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한 측면이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오히려 시작이다.

조명래

미국이 FTA를 추진하다가 결렬된 사례가 50여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만일, 'GOOD FTA'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본래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약속했던 '안 될 수도 있다'를 어떻게 실현시킬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제시된 대차대조표에 드러나는 엄청난 현실과, 그 결심 사이의 너무나 넓은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전면투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재협상을 마지막 조건에 넣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 해야겠다.

이해영

과기문제와 관련해 간략한 용어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한미FTA도, 하나의 조약이기 때문에 비엔나조약에 구속되는 협정이다. 비엔나조약법에 따르면 비준, 동의, 가입, 승인 등을 통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된다. 비준은 위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다. 그런데 흔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준권에 대한 것인데,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는 비준권이 없다.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 그게 바로 비준이다. 그것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느냐 아니냐가 학자들 간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일반적 통설은 대통령의 비준권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해서 비로소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한다고 되어있다. 만일, 6월 30일 비준이 이루어진다면, 그 비준에 대한 동의여부를 국회에 묻게 된다, 용어의 문제지만,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조약이 파기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짚고 넘어갈 부분으로는, 조약 파기의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협정문에 들어가게 된 다는 것이다. 보통 FTA의 경우, 협정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체결 후 파기에 있어 그 효력의 종료는 향후 10년이 될 수도 있다.

범국본 내의 참여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반대운동의 동력은 매우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가 문제인데, 3월 말까지 싸우고, 체결이 되어버린다면 소위 '집에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3월 말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상황의 종료까지 일수를 계산해 봐도, 9월 경이 되어야 비준동의 등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 '3월에 한 판 불고서는 집에 가자'는 분위기로는 안된다. 멕시코의 사례라든가, 광우병,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부동산 등 여론을 환기시켰던 문제들은 매우 의식적인 개입의 결과이다. 그러한 개입이 지속적이지 못하다 보니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알맞은 담론을 설정하고, 그 상황을 정확히 진단,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법률적으로 존치되는 기간은 9월 까지다. 그러므로 반대진영도 적어도 9월말까지는 반드시 가야한다.

이병천

1차부터 어제 8차 협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주로였는데, 이제는 현실적 윤곽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신속하게 분석·종합해야 한다, 법 제도의 변화 등, 전체를 망라하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대선국면에서 FTA라는 안건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나왔던 것 같다. 또 다른 기회에, 머리를 맞대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KNSI**